

대프리카 적금 출시 열대야맞추면 우대금리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대프리카 예·적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고객(상품별 1인1계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프리카 예·적금'은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예금 1인당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적금 5만원 이상 20만원까지이며 예금은 3,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영업점과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올해 8월 중 무더운 기온, 총 열대야 일수 맞추기 퀴즈를 통해 우대금리가 연속 지급된다.

기본이자율은 예금 연1.0%, 적금 연1.3%이며, 대구 지역 8월 기온 중 최고 38℃ 이상인 일 수가 2일 이상이면 예금 연 0.20%p, 적금 연 0.50%p의 우대이자율이 적용된다.

상품 가입 후 '대구 8월 열대야 일수'를 맞춰보세요' 이벤트 퀴즈에 응

모하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 이내의 고객에게 연2.0%p 우대이자율을 제공하고 예금 최고 연 3.2%·적금 최고 연3.8%를 받을 수 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은 "최근 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하고 있는 '대구희망나눔캠페인'과도 연계해 ESG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품 가입 후 '대구 8월 열대야 일수'를 맞춰보세요' 이벤트 퀴즈에 응

모하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 이내의 고객에게 연2.0%p 우대이자율을 제공하고 예금 최고 연 3.2%·적금 최고 연3.8%를 받을 수 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은 "최근 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하고 있는 '대구희망나눔캠페인'과도 연계해 ESG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7월부터 강력 대출 규제... 자영업 '미래소득 반영' 혼선

다음달 1일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적용 대상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 청년·소상공인은 미래 소득 산정해 반영 은행권, 소상공인 미래 소득 인정에 난색

금융권이 다음달부터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부채 축소에 인간미를 쓰고 있는 금융당국의 압박 탓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은행·생명·손보·여신금융협회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당국과 업권이 머리를 맞대는 가계대출 동향 점검 회의는 통상 격주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 업권별 여신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동향을 체크했다.

지난주 회의 당시 금융당국은 DSR 계산법을 비롯한 규제 관련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개인 단위 DSR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청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그동안 대출은 담보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

는 개인 소득과 원리금상환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규제 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DSR 40%가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된다.

은행 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 효과(Balloon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당국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를 억제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요구에 시중은행들은 이미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은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 지난 14일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인하시키거나 축소했다. 농협은행은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중단하고 일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췄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감안해 대출 한도 산출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해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소상공인에게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당국이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밝히자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 자료가 마땅치 않고 업종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된 청년은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늘어날테니 미래 소득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소득이 변하게) 될지 정부도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업계 측 참석자들이 모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은행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미래 소득 인정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We Deliver

2021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TERRACE 테라스
 Client: MCDONALD'S 맥도날드
 Agency: LEO BURNETT LONDON 레오버넷 런던
 Product: MCDONALD'S 맥도날드
 Copy: 매장으로 직접 올 수 없다면, 맥도날드가 찾아가겠습니다.

현대해상 등 손보사 4곳, '석탄발전 보험' 중단키로

'석탄을넘어서', 11개 손보사 질의 답변 공개 'DB손보·현대해상·한화손보·하나손보' 참여 ESG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활동에 박차

보험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해보험사 4곳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22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이 석탄발전소 관련 모든 보험 제공 중단을 표명했다.

앞서 '석탄을 넘어서'는 주요 손해보험사 11곳에 서신을 보내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보험 중단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다. 삼성화재와 NH손해보험은 건설 보험만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업계는 국내 보험사들도 '탈석탄'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는 최

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체 석탄 금융의 3분의1은 보험 형태로 제공됐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제공한 보험 규모가 50조원이 넘는다는 수치도 존재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화재 15조 390억원, DB손해보험 11조 9750억원, 현대해상 10조 6330억원, KB손해보험 6조 8277억원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점유율 '빅3' 업체들이 이미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만큼, 이번 손보사들의 중단 입장을 계기로 관련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펑원(Peng Yuan)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석탄보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가 이탈하면서 앞으로는 석탄보험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봤다. 이진선 캠페이너도 "탈석탄 금



보험산업 ESG 경영 선포식. 사진=시장경제DB

융은 세계적 추세가 됐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들도 이 추세에 동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이달 17일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 국제발행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도 매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전량 '미매각'됐다.

석탄을넘어서 측은 "삼척화력발전소를 마지막으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보험을 반드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보험사들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사회적 책무를 다해 '탈석탄 보험'을 선언할 때까지 끝까지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대출 더 옥죄는 '청개구리 정부'... DSR 규제, 7월부터 전면 확대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에는 미적용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고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7월부터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 지침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개인별 DSR 40%를 적용했지만 7월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모두 40%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사업

공고를 낸 사업자들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공고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공고된 사업장이어도 7월 1일 이후부터 매매된 상황이라면 변경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행정지도에는 DSR 산정 시 신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대출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했다.

기존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별도의 거치 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분할 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이면 실제 만기를 적용한다. 홍성인 기자